

혈세로 맥쿼리 주주 배만 불러…재협상·공익처분 시급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권 취소〉

‘의혹 투성이’ 민선 6기 광주시-맥쿼리 제2순환도로 변경 협약

〈5〉비리 얼룩진 협상 전환은 무효

변경협약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 전 이미 맥쿼리가 자본구조 변경 전문가를 광주시장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소개한 것은 물론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 담당공무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변경협약 자체의 ‘순수성’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12년간 행·재정력을 쏟아부은 협상 결론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와 그로 인한 1014억원 절감이었다. 이 금액에는 맥쿼리 자회사 (주)광주순환도로 투자가 설치한 1구간 하이패스 비용 27억원도 포함돼 있다. 합의금 369억원을 포함하면 절감 규모는 더 낮아진다.

2028년까지 통행료 수입이 매년 2%씩 증가하고, 물가상승률이 1.31%에 고정돼 있어야 하는 등 조건에 따라 이 금액은 늘어날 수도, 줄어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는 합의금과 함께 미지급금 851억원을 주고, 투자금 2341억 5000만원에 대해 9.8%의 수익률을 보장해줬다. (주)광주순환도로투자의 법인세 345억원(추정치)도 내주는 조건이다.

맥쿼리는 공식자료에서 “(변경)협상 결과 MRG와 유사한 대안 구조를 고안해 미래 현금 흐름의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주주의 수익률 및 가치를 보존하고 정치적·법적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했다”고 자평했다. 이는 광주시가 변경협약으로 별다른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변경협상의 잘못된 부분을 점검해 맥쿼리와 재협상 또는 공익처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맥쿼리 주주의 고수익 보장 위해 지자체 혈세 투입하는 꼴=맥쿼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 등 전국 11개 도로와 1개 항만의 장기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이 자산을 통해 최대한 수익을 올려 주주인 국내 기관투자자(48.9%), 국내 개인투자자(29.0%), 외국인투자자(22.1%)에게 배당하고, 맥쿼리 임직원의 연봉을 챙겨가는 구조다. 뉴튼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가 8.2%의 주식을 가진 최대주주이며, 맥쿼리그룹 역시 3.8%를 가지고 있다.

맥쿼리는 발표자료에서 “(맥쿼리는) 지난 2002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상장 인프라펀드”라고 소개하고 “KOSPI 대비 약 1.8배의 누적 총 주주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상장 이래 총주주수익률은 202.9%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익률은 연 9.4%에 분배수익률은 7.2%, 연평균 분배금은 140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맥쿼리는 국내 기관투자자 등의 수익 제고를 위해 지자체·정부의 도로, 항만 기반시설의 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여기에 고리의 차입금을 넣어 이자를 챙겨가는 방식으로 지자체·정부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시는 변경협약을 통해 MRG 대신 대안적

자본·사업 재구조화 못하고

법인세 대신 내주며 고수익 보장

광주시 재정·시민에 도움 안돼

MCC(비용보전방식)을 도입했지만, 근본적인 자본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다.

◇민선 6기 변경협상 재검토 및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야=변경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참여자치 21이 지적한 것은 법인세를 광주시가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부담하는 법인세 규모는 345억원 정도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1조에서는 ‘운영비에서 법인세는 제외된다’고 적시돼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맥쿼리 측은 “MCC는 법인의 수입을 보전하는 수익형 민자사업과 다르다”며 “사업재구조화를 완료한 거가대교, 우면산터널 등에서도 이 같은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광주시는 (주)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를 상대로 1심 승소, 2심 일부 승소 등 유리한 여건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변경협상이 광주시민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없었다. 5.63km 구간을 가는데 1200원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요금 인하만큼 절실한 것이 없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요금 인하는 곧바로 광주시의 재정 부담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행수입이 2028년까지 매년 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오히려 시민 부담이 늘는 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생겼다.

시 관계자는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여건이지만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인상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민선 7기 들어서는 공익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공익처분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조계에서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만큼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 재협상 또는 공익처분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선 7기 들어 지난 4월부터 서울 정부법무공단, 지역 법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받는 등 구체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변경 협약 당시 가장 최선의 방법은 투자자를 변경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지역 한 변호사는 “변경협상이 상호 신뢰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고, 비리 사건까지 발생한만큼 광주시가 정당하게 재협상을 요구하고,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맥쿼리를 상대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수보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6주 만이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예산, 국민 삶에 제때 흘러 들어야…유치원 3법 연내 처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늦게라도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년 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고 평가한 뒤, “경기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미래 원천기술 등의 연구 개발,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아시아와 미주 사이를 잇는 항공 허브 대한민국,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국내 최초 조인트벤처 체결을 통해 아시아 80곳과 미주 290곳을 보다 빠르게, 보다 편리하게 연결합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KOREAN AIR △ DELTA



www.koreanair.com

기류 바뀐 靑 “서두르거나 재촉 않을 것”

김정은 서울 답방 내년초로 넘어가나

준비 열흘 필요…北 아직 답변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가 점차 내년 초로 기우는 흐름이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단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확답이 늦어지는 데 따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안에 답방이 성사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점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애초 오는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이고 12월 말이 북한 내부의 총화(결산)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8~20일께 답방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연내에 성사되려면 청와대와 정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9일까지는 북측으로부터 답변이 와야 하기 때문이다.

또 남북정상회담 의제 설정 등을 위한 고위급회담, 경호·보도·의전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답방 준비에 열흘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9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의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전혀 예측이 안 되기에 구체적인 준비를 못 하고 있다”며 “최희도 결정되면 어떻게 준비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말을 넘겨 월요일인 10일까지도 북측

에서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연내 답방 확률을 그만큼 낮게 점치기 시작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담의 실익 등을 고려한 북한의 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 문제를 마무리 짓고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해 진전을 이루고 나면 제재로 막혀 있는 본격적인 경제에 숨통을 틔 수 있는 만큼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더 많은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있다.

이 때문에 이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지가 아니라 내년 초로 점쳐지는 북미정상회담 전이 될지, 후가 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물론, 김 위원장의 답방 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로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효과를 기대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회담에서 눈에 띄만한 진전이 없다면 ‘빈손’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북측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는 언제든지 북한으로부터 답이 올 여지가 있다고 보고 ‘연내 답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의 통보 시점에 따를 수밖에 없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것은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